‘혈세 잔치’ 더이상 안돼…특권 청산해야

새마을회 지원 이대로 좋은가

하 이제는 거듭나야할 때

광주 시민단체 “수십년간 관행적 특혜 지원 철회를”

자치단체·의회에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 폐기 촉구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9일 광주시와 의회를 상대로 “새마을장학금 지원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새마을회를 비롯한 관변단체에 매년 관행적으로 수억원씩 지원되는 ‘혈세 특혜’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전남도, 22개 시·군이 매년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역새마을회에 지원하고 새마을회 측이 이 중 70%가량을 회원 자녀 장학금, 조직 운영비, 자체 행사비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광주일보 취재결과〈2월14일자 6면〉 드러나면서다.

“새마을회관을 지어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광주시 서구·북구 새마을회 측 요구〈광주일보 2016년 10월 17일자 6면〉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과 맞물리면서 새마을기 철거 시민운동으로 번진데 이어 시민단체 측이 새마을회 지원 조례 폐기 및 예산 지원 조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19일 “대표적인 특권과 반칙 조례인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새마을회를 비롯한 관변단체에 대한 혈세 특혜지원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박정희 유령 새마을회 특혜지원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고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30억원 이상의 혈세를 새마을회에 지원하는 것은 혈세로 특혜를 베풀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회원들의 자발적 회비를 바탕으로 공익적 활동을 벌이는 대부분 시민단체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했다. 새마을회가 벌이는 새마을운동에 대해선 ‘박정희 유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규정했다.

특히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새마을회 회원자녀라는 이유로 수십년 동안 장학금까지 예산으로 지급해왔고 올해 편성된 새마을장학금 예산액만 최대 9억원에 달한다”며 자치단체가 지원 근거로 내세우는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각 자치구의 경우 1986년부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까지 제정해 50대 50의 비율로 31년째 새마을회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다”며 “특정 단체 회원 자녀라는 이유로 시민 혈세가 장학금으로 지급돼야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지방의회를 동시에 겨냥했다.

단체는 새마을회를 향해서는 “새마을회 회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활동도 폄하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그러나 새마을회를 제외한 광주의 어느 시민단체가 자치단체로부터 이런 호사와 특권을 누리고 있나. 시민 혈세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청산해야할 반칙과 특권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단체 관계자는 “촛불민심 요구에 부응해 광주 자치단체와 의회가 전국 최초로 새마을기를 철거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의회가 열리면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기 등 남은 적폐 청산에도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새마을회 측은 “지역새마을회가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비교해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예산지원은 인력과 행정력 부족으로 자치단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새마을회가 맡아서 추진하면서 받게되는 최소한의 사업비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새마을회 TF팀 꾸려 “개선안 마련”

광주시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 쇄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새마을회는 지역새마을회에 지원되는 예산규모와 사용내역, 새마을회관 건립 비용 지원 요구에 대한 언론보도와 시민사회단체 반발이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새마을기 철거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조직 쇄신안 마련에 들어갔다.

외부인사 5명을 포함, 총 6명으로 꾸려진 새마을TF팀이 논의할 주요 과제로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 ▲사업추진방식 개선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아이템 발굴 등이 꼽히고 있다.

양동천 광주시새마을회 사무처장은 “TF팀은 새마을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을 벌여나가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며 “지난 15일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매주 TF 회의를 열고 광주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바로잡습니다

광주일보 15일자 6면 ‘광주시·전남도·구례군·곡성군, 새마을회관 건립 수억씩 지원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목과 기사내용 중 ‘곡성군’은 ‘고흥군’의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

금남로 촛불 열기 지난 1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16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촛불을 든 참가자들이 ‘박근혜 탄핵 즉각 인용’ ‘특검연장’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촛불집회 1만명…롯데백화점으로 행진한 까닭은

평화 상징 파란 종이비행기 날리며 “사드 부지 제공 철회”

전남 14개 시·군서도 열려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16차 박근혜 퇴진 광주시국 촛불대회’ 참가자들은 광주지방법원을 향해 행진하던 기존 집회와는 달리 이번엔 롯데백화점으로 향했다.

이날 촛불을 들고 금남로 4가에서 금남로 5가 롯데백화점 앞으로 행진한 참가자들은 롯데백화점 정문 앞에 모여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 부지 제공 즉각 중단’이라는 경고 현수막을 흔들었으며, 몇몇 시민은 평화를 상징하는 ‘파란 종이비행기’를 날리기도 했다.

본무대가 있는 금남로에 돌아오는 길에 시민들은 일제히 ‘임을 위한 행진곡’ ‘하여가’ 등을 제창했으며, ‘광주세월호 시민상주회’에서 준비한 ‘부부젤라’를 불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이하 광주본부)’는 이날 오후 6시 금남로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제16차 광주 시국촛불집회’에 1만여명의 광주시민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즉각 탄핵 인용 ▲특검 수사 연장 ▲부역자 처벌 ▲적폐청산 ▲개혁입법 ▲사드배치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어 박근혜 집권 4주년인 2월 25일 열리는 ‘촛불 총궐기’에 대규모로 참여, 광장에 촛불을 밝혀달라고 외쳤다.

박상규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NCC 회장은 주제발언을 통해 “전국적인 촛불총궐기로 청와대에 숨어있는 박근혜를 그만의 아방궁에서 반드시 끌어냅시다”라며 “오는 25일 99%의 민중이 주인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 투쟁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장헌권 6·15 공동위원회 광주본부 공동대표도 “박근혜·최순실의 가장 큰 실패는 ‘안보’ 였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남지역 14개 시·군에서도 시민 2700여명 참여한 가운데 16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불법조업 中어선 벌떼처럼 몰려들며 저항

목포해경 올 첫 M60 900발 쏘며 쫓아내

목포해경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무허가 중국어선 70여척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기관총을 사용, 쫓아냈다고 19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16일 밤 9시5분께 목포시 가거도 남서쪽 74㎞(어업협정선 내측 25㎞) 해상에서 우리 해역을 집단 침범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30여척을 대상으로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과 합동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중국어선들은 쇠창살과 등선방지용 철망을 설치, 해경의 검문검색을 방해했으며, 해경 어업지도선은 이날 밤 10시 17분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중국어선들이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집단으로 해경 경비함과 어업지도선에 돌진하며 저항했다.

이에 해경은 저항하는 중국어선을 상대로 수차례 경고 방송을 실시했고 밤 11시 15분께 가거도 남서쪽 56㎞ 해상에서 M-60 900을 일제히 발사했다. 해경이 무기를 사용하자 중국어선은 저항을 멈추고 어업협정선 외측으로 도주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무기사용매뉴얼 발표 후 총 20회에 걸쳐 3005발을 발사해 불법으로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강력 대응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의붓동생 인질 삼고 친모에게 돈 요구

광주광산경찰, 20대 영장

의붓동생을 인질로 잡고 친모에게 거액의 현금과 여권을 요구한 20대 탈북민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광산경찰은 집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의붓동생을 인질로 잡고 외출 중인 어머니에게 금품을 요구한 이모(24)씨에 대해 인질강도 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어머니와 함께 탈북한 이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30분께 광산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생(11)의 손을 테이프로 묶고 흉기로 위협하는 장면을 사진 찍어 어머니에게 보낸 후 “현금 3000만원과 여권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그는 현금과 여권을 받으면 탈북 후 1년여간 머무르며 사귀었던 친구들이 있는 중국으로 건너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날 오전 “만날 동생만 챙겨준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다툰 후 어머니가 외출하자 동생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벌였다. 경찰은 “현금을 주겠다”며 안심시킨 후 현관문이 열리는 틈을 타 집 안으로 진입, 이씨를 체포하면서 4시간가량 이어지던 인질극은 막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감정 통제가 잘 안 되는 난폭한 성격을 소유한 인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서 “1년 여전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노후 의지하며 살던 자매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던 70~80대 자매가 연탄가스에 중독돼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41분께 화순군 남면 사평리 양모(82·여)씨 단독주택의 부엌에서 양씨와 양씨의 여동생(73)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양씨 자매는 10여년 전 각각 남편과 사별하고 인근에 살며 매일 왕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니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연탄으로 취사와 난방을 해왔고, 평소에 거동이 불편해 부엌에서 지내왔다고 주변 지인들은 전했다.

경찰은 침입 흔적과 외상이 없고 환풍기가 고장나 있었으며 외풍을 막기 위해 집안 모든 틈새에 청테이프가 부착돼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 환기가 되지 않아 연탄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여성승객 성폭행하려다 살해 벌판에 유기한 택시기사 검거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저항에 부딪히자 목 졸라 살해한 뒤 벌판에 유기한 50대 택시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택시기사는 여성 승객이 술에 취한 채로 심야에 택시에 탄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목포경찰은 19일 이 같은 짓을 벌인 택시운전기사 강모(56)씨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 조사 중이다. 강씨는 지난 18일 새벽 3시20분께 목포시 하당동에서 승객 A(여·26)씨를 태우고 대양산단으로 가 성폭행하려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살해 후 시신을 후미진 공단 벌판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18일 밤 10시께 A씨 가족으로부터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강씨를 붙잡았으며, 강씨는 경찰에 혐의 상당부분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만취 운전자 음주측정 거부 행패…뒤늦게 측정해보니 0.20%

쌍나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며 폭력을 쓴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19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16일 밤 9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동한 수완지구대 경찰관 B(48)씨가 음주 감지기를 들이대자 욕설하며 그의 팔을 한 차례 내리치면서 행패를 부린 혐의.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A씨)가 술에 만취해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속, 성명 등을 고지한 후 음주 측정을 하려는데 폭력을 휘둘렀다”면서 “소란이 끝난 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0%로 나타난 만큼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 2가지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 /김형호기자 khh@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계>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6타경 3027	1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751-1 592㎡	대	174,252,4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진도군 진도읍 동외3길 1 1호 124.62㎡ 부속건물43.96㎡[점포] 제시외창고등 58.5㎡	단독주택	174,252,400	
[대지/임야/전답]					
2015타경 755	1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778-6 656㎡[차정곤 지분1/3전부.지분매각]	대	66,795,000 66,795,0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제한
2016타경 165	2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276 3197㎡[현황일부대]	전	26,854,800 26,854,800	매각대상아닌제시외건물소재
2016타경 2666	1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781-1 1320㎡	답	23,343,900 23,343,900	일괄매각.일부도로.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790 1405㎡	답		
		동소 791 982㎡	답		
2016타경 3294	1	진도군 지산면 고야리 814-1 1677.2㎡	답	52,922,100 52,922,1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817-1 5883.1㎡	답		
2016타경 50405	1	해남군 현산면 조산리 196-1 317㎡	전	4,842,500 4,842,500	일괄매각
		동소 195 301㎡[물건번호1:매각제외제시외가축사[건축물대장없음]및보온창고,비닐하우스소재]	대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6타경 50405	2	동소 산100-9 1641㎡	임야	4,741,000	일괄매각.목록2현황일부담수지
		동소 산100-12 620㎡[매각외분묘2기소재]	임야	4,741,000	
2016타경 50467	1	완도군 청산면 청계리 산67 26777㎡	임야	12,049,650 12,049,650	임야도상맹지
2016타경 50474	1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648-5 4945㎡[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황묵전,맹지]	전	39,065,500 39,065,500	2016타경3157[중복]
[기타]					
2016타경 165	1	해남군 현산면 덕흥리 553 2199㎡ 해남군 현산면 고현길 284 195㎡ 제시외 관리사 등 199.5㎡	잡종지 동식물관련시설	112,395,700 112,395,7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7. 3. 6.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7. 3. 13.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2호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7. 2.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최성관